

May 26, 2026

2026년 4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6년 4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정책 동향, 기후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33건)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고시 등)	주요 개정 내용	비고
'26. 4.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화학
4. 28. (4.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과 추가 할당 사유를 신설 -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와 시장 참여자 등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요건 및 기준을 제시	기후

<p>4. 21. (5. 12.)</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 면제 규정 신설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횟수 규정을 확대 적용 	<p>폐기물</p>
<p>4. 21.</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기준을 삭제 - 분할납부의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p>폐기물</p>
<p>4. 16.</p>	<p>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최근 4년간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 -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p>대기</p>
<p>4. 16.</p>	<p>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각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규정 - 우수시설 지정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근 4년간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등으로 규정 -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시 그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하도록 규정 	<p>대기</p>
<p>4. 7. (10. 8.)</p>	<p>화학물질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 - 기후부장관은 위 내용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폐기·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p>화학</p>

		<p>근거를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 	
4.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입 시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을 면제 - 기후부장관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등의 권한을 각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중 작성 요령을 보완하는 등 일부 개선 	폐기물
4. 7. (27. 4.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 -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 	대기
4. 7. (10.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와 수행 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수질
4. 7. (7. 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 - 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 사업 항목에 추가 	수질

4.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 -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 -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 	기후
4. 7. (10.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 -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 	화학
4. 29.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메톡시클로르, 데클로레인플러스, UV-328 등 3종을 신설 - 취급금지 물질의 특정면제 국내적용 사항 화학물질 5종을 개정 	화학
4. 28.	(기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보호 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 136종을 원래의 화학물질 명칭으로 정비 -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2종에 대해 CAS 번호 부여 및 해당 CAS 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 	화학
4. 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대한 정의를 법에 맞추어 재정의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 고시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규제 합리화를 위해 유사제도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신설 - 2차오염 방지 대책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 	
4. 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대한 정의를 법에 맞추어 재정의 - 고시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 - 중복 규제 합리화를 위해 유사제도 인정범위 확대 	화학 (화학물 질안전 원)
4. 21.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에너지
4. 20.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파손 및 변질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 자동화 및 이형제품 등 특수한 포장 형태로 인해 불가피한 포장에 대해 1회용 수송포장 기준 예외 사항을 규정 -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를 포함한 수송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1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를 적용 	폐기물
4. 17.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를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신규 지정 -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류경보제 소재지를 변경 	수질
4. 16. (4. 22.)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투과검사 전용 작업장 신축으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에너지

<p>4. 16. (4. 24.)</p>	<p>(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불화탄소(HFCs)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 포함 - 특정물질에 포함된 HFCs를 산업부에 특정물질 실적보고 하는 것을 기후부에 하는 냉매판매량 신고로 같음하도록 개정 	<p>대기</p>
<p>4. 15.</p>	<p>(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10종을 결정·고시 	<p>대기</p>
<p>4. 9.</p>	<p>(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첨가제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절차를 신설하여 연료첨가제 사전검사와 연료첨가제 재검사 절차 세부사항을 추가 	<p>대기 (국립환경과학원)</p>
<p>4. 8. (4. 14.)</p>	<p>(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 대행을 위해 한국환경보전원, (사)한국생태복원협회를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대행업무를 고시로 제정 	<p>자연</p>
<p>4. 8.</p>	<p>(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안보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기후부장관이 에너지절약 시책으로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시행 방법 등을 제시 	<p>에너지</p>
<p>4. 7.</p>	<p>(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 - 조사지점 소실에 따른 지점 조정 및 위·경도 오기를 수정 	<p>화학</p>
<p>4. 7.</p>	<p>(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일부 수변구역을 제외하여 변경 	<p>수질</p>

4. 6.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보급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인 "태양광 보급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에너지
4. 2. (6.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가 도급신고하는 경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실시계획을 추가 	화학
4. 1.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용자금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부소관 용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의 '26.2/4분기 용자(대출) 금리를 금리인하 대상사업은 1.28%(2.28%), 그 외 사업은 2.28%(3.38%)를 적용 	기타
4.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따라 경기 위축 및 에너지 가격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 추진 -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대형 사업 지원으로 용자지원 기준을 완화 	에너지
3. 30.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를 추가 -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 - 임시차량 운영 근거를 현행화 	폐기물

2. 주요 기후부 입법(행정) 예고(31건)

예고 기간	법령명 (행정규칙명)	주요내용	비고
4. 30. ~ 6.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절차와 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금액을 설정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정보등록·공개 대상과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 	대기
4. 28. ~ 5.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절차 신설 	화학
4. 23. ~ 5. 13.	수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대상의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 -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여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 	수질
4. 23. ~ 5. 13.	수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조청소업 시설기준을 구체화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표지문양, 주의사항 문구를 개정 - 수도법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수질

4. 22. ~ 5.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등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직무대행을 개선 	에너지
4. 20. ~ 6.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삭제 	수질
4. 20. ~ 6. 1.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여러 기관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위임·위탁된 기관별로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정기보수가 홍수기 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보수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 - 동 규칙이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수질
4. 8. ~ 5.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화학
4. 6. ~ 5. 18.	지하수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오염정화 이행기간의 근거 규정을 마련 - 오염정화 이행기간의 산정·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규정 - 오염평가보고서 작성, 정화계획의 수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세부사항은 고시로 제정 	수질

4. 3. ~ 5. 1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조정 	에너지
4. 2. ~ 5.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에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추가 	화학
4. 1. ~ 5. 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을 포함 	수질
4. 1. ~ 5. 11.	낙동강(금강,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을 포함 	수질
4. 1. ~ 4.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하여야 할 실내공기질 기준, 지정·재지정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을 규정 - 우수시설 지정 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 	대기
4. 29. ~ 5.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인쇄회로기판 등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으로 추가 	폐기물
4. 28. ~ 5. 1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 절차를 수정하고, 보완 요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장 방문 절차 운영 기준을 정비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을 개정 	
4. 24. ~ 5. 13.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에 공기열에너지가 추가됨에 따라, 공기열에너지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열 등의 정의와 인정기준, 측정방법 등 규정을 제정 	에너지
4. 23. ~ 5. 1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를 현행화 -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 -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 추가 	대기
4. 22. ~ 5.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공석 시 권한대행을 미리 지정하는 직무권한 내용을 신설 -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 방법에 '전자적 심의' 문구를 반영 	화학
4. 22. ~ 5. 1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79 종을 신설 -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13 종 추가 -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화학 (화학물질 안전원)
4. 15. ~ 5. 4.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 기준 재정비 	기타
4. 16. ~ 5. 6.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고시로 제정 	대기

<p>4. 16. ~ 4. 27.</p>	<p>(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 	<p>화학</p>
<p>4. 8. ~ 4. 27.</p>	<p>(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시설 및 규모별 진단비용을 규정 	<p>수질</p>
<p>4. 8. ~ 4. 27.</p>	<p>(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의 진단 대상 시설 및 시기, 범위와 방법 등을 명시 - 수처리 기술진단의 법적 실시 완료 기준을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로 일원화 - 연간 기술진단 계획을 연 1 회 외에 필요시 추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p>수질</p>
<p>4. 7. ~ 4. 27.</p>	<p>(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석재와 폐합성수지류 중 IC-Tray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로 변경 	<p>폐기물</p>
<p>4. 7. ~ 4. 22.</p>	<p>(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배출량이 3,000tCO₂-eq 미만으로 감소 시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 배출효율이 우수한 배출량 잉여 업체와 재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할당이 가능하도록 규정 - 추가할당 판단기준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실제 배출량으로 명확하게 규정 - 제 4 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p>기후</p>

4. 7. ~ 4. 2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자동측정방법- 광대역분광법을 시험방법으로 신설	대기 (국립환경 과학원)
4. 6. ~ 4. 27.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 IC 트레이를 포함 - 수입업자에 폐 IC 트레이 제조업자를 추가	폐기물
4. 6. ~ 4. 27.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국내 수급 부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여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수입 금지 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
4. 2. ~ 4. 23.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	화학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42건)

발의일자 (발의자)	법령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26. 4. 27. (정성국의원 등 12명)	소음·진동관리법	- 기후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대기
4. 27. (박수현의원 등 13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 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	에너지
4. 27. (강명구의원 등 11명)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 중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	수질

<p>4. 24. (김성원의원 등 10명)</p>	<p>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 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유연하게 순환이용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보관·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 -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 -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 	<p>폐기물</p>
<p>4. 24. (최혁진의원 등 10명)</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 	<p>기후</p>
<p>4. 24. (박지혜의원 등 12명)</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 	<p>기후</p>
<p>4. 24. (김기웅의원 등 10명)</p>	<p>실내공기질 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 -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p>대기</p>

<p>4. 22. (김위상의원 등 11명)</p>	<p>전기안전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일정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 -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개선 	<p>에너지</p>
<p>4. 21. (김소희의원 등 25명)</p>	<p>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해야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 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연구 관련하여,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하도록 확장 - 관계 기관 등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p>기후</p>
<p>4. 21. (이종배의원 등 12명)</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p>기후</p>

<p>4. 21. (박수현의원 등 12명)</p>	<p>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구", "하구관리구역", "하구복원사업"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등 하구 생태의 회복을 통한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자연자산의 보전 등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p>수질</p>
<p>4. 17. (김용태의원 등 10명)</p>	<p>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 	<p>기타</p>
<p>4. 17. (정혜경의원 등 10명)</p>	<p>한국발전공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 5개사를 통합한 공공 소유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의 고용 승계 및 전환 보장, 대규모 공적 투자 체계를 구축 	<p>에너지</p>
<p>4. 16. (이광희의원 등 10명)</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부령으로 신설 	<p>자연</p>
<p>4. 15. (이기현의원 등 11명)</p>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부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노후 설비의 수리·교체 및 가동제한·중단,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p>에너지</p>

<p>4. 15. (유용원의원 등 12명)</p>	<p>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p>에너지</p>
<p>4. 13. (박홍배의원 등 28명)</p>	<p>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 -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 -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 	<p>기타</p>
<p>4. 10. (김소희의원 등 10명)</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p>기후</p>
<p>4. 10. (강명구의원 등 14명)</p>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공지하도록 규정 	<p>수질</p>
<p>4. 10. (백혜련의원 등 11명)</p>	<p>에너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 	<p>에너지</p>

		-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되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	
4. 6. (김정재의원 등 12명)	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 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	에너지
4. 6. (이원택의원 등 10명)	전기사업법	-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하도록 규정	에너지
4. 6. (이원택의원 등 10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	에너지
4. 3. (박정의원 등 11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화학
4. 3. (윤종근의원 등 11명)	전기사업법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	에너지

<p>4. 3. (복기왕의원 등 11명)</p>	<p>전기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 	<p>에너지</p>
<p>4. 2. (복기왕의원 등 10명)</p>	<p>에너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를 생활권 단위 접근 전환 등으로 개선 	<p>에너지</p>
<p>4. 2. (추미애의원 등 11명)</p>	<p>하천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 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 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 	<p>수질</p>
<p>4. 1. (이종배의원 등 10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p>폐기물</p>
<p>3. 31. (이학영의원 등 10명)</p>	<p>화학물질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 - 기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과 대비 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적 지원 등을 실시 	<p>화학</p>
<p>3. 31. (이학영의원 등 10명)</p>	<p>소음·진동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p>대기</p>

<p>3. 31. (용혜인의원. 안호영의원. 서왕진의원 등 30명)</p>	<p>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p>에너지</p>
<p>3. 31. (용혜인의원. 민병덕의원 등 18명)</p>	<p>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 	<p>에너지</p>
<p>3. 31. (용혜인의원. 민병덕의원 등 19명)</p>	<p>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 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 	<p>에너지</p>
<p>3. 31. (정점식의원 등 15명)</p>	<p>물관리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와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p>수질</p>
<p>3. 31. (정점식의원 등 15명)</p>	<p>먹는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를 이행 	<p>수질</p>

<p>3. 31. (정점식의원 등 15명)</p>	<p>수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p>수질</p>
<p>3. 31. (허중식의원 등 10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p>폐기물</p>
<p>3. 30. (박지혜의원 등 15명)</p>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자체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p>기후</p>
<p>3. 30. (이재관의원 등 17명)</p>	<p>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자가 기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p>에너지</p>
<p>3. 30. (허중식의원 등 10명)</p>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이 발생한 경우, 기후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p>화학</p>
<p>3. 30. (안호영의원 등 10명)</p>	<p>폐기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 	<p>폐기물</p>

II.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녹색전환 추진 필요성

1) 에너지 수입 의존의 현실

-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약 93%를 수입에 의존
 -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는 국제 정세에 따라 타격
 -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상황으로 석유·가스의 공급·가격 크게 변동
 - 에너지는 국가의 안정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 문제

2) 필요한 변화, 녹색대전환(GX)

-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변화
 - GX는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와 산업
 -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의 전환을 의미
- 재생에너지, 역대 최대 성장으로 세계는 이미 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 585GW 신규 설치, 신규 발전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 전 세계 전력의 40% 이상이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주요 전력원으로 전환 중
 - 4,600GW 재생에너지 추가 설비 전망(~'30), 태양광 중심 급속 성장

3) 바뀌는 경제의 기준

-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기준
 - ESG 투자확대, 친환경 공급망 요구 증가, 탄소배출 관리 강화
- 녹색대전환은 곧 새로운 경제 질서
 -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 하면 2030년까지 화석연료 비중 80%⇒66%,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9%⇒20% 이상, 전기화율 22%⇒30% 까지 향상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1)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

- 중동전쟁으로 인해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 유효하지 않은 상황
- 재생e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 변화 필요
- 재생e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 추진

2) 녹색대전환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

i. 2030년 재생에너지 20% 이상 달성

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탄소중립 달성

-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RE100 등
- (풍력)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 안전점검체계 등

② 석탄발전소 60기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

-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지원대책 수립
- 2040년 이후에도 수명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 등

③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

-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 우선 보급, LNG 발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e 기반 난방 전환

ii. 녹색 제조 글로벌 3강 도약

④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녹색산업 본격 육성

-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 추진
- 한전기술지주 설립, 에너지벤처 창업,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

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원료, 연료의 청정화

- 3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 '28년 완공, '37년 이후 상용화
- 석유화학 분야는 전기 NCC (Naphtha Cracking Center)로 전환, 공정 효율화로 제품 고부가가치화
- 그린수소, 핑크수소,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통해 탄소 저감

⑥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 추진

-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목표 조기 달성

-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
-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AI화와 전기화

⑦ **에너지 산업의 금융과 재정 지원 강화**

- 녹색금융 활성화로 기업 투자를 유도,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 강화
- 기존 화석연료 투입 보조금은 재생e 보조금으로 단계적 전환

iii. **에너지전환 지역균형 발전**

⑧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

-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 대폭 확대
-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 지역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용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
-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 본격 실증·확산

⑨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요금, 전력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

- 지역별 요금제 도입, 시간대별 요금제 4월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

⑩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

- 햇빛·바람소득 마을 전국 확산,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추진

3. **국민 참여 에너지 소득 실현**

1)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 **(햇빛소득)** 금융, 인·허가, 계통 지원으로 햇빛소득마을 등 조성
 - 자산지소·에너지 자립, 주민 참여 수익 발생, 마을의 생활편의 개선
- **(바람소득)** 공공 주도 계획입지 풍력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 확대
 - 발전 수익 지역사회 공유,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사업 재원 마련
- **(계통소득)** 공공 주도 계획입지 풍력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 확대

- 경제적 보상·참여 확대, 사업 참여로 수익 공유 가능, 이익을 함께 나누는 주체로 전환

2) 전기·수소차의 2030년 신차 40% 보급 목표 조기 달성

- (구매보조금 재설계) 구매보조금 지방 우대 비중, 전력 자급률 등 고려
 - 전기·수소차 구매 부담 완화, 상황에 맞는 지원으로 체감 혜택 확대
- (전기차 조기 전환) 경차, LPG 택시, 렌트카, 법인차 등
 - 도심 매연·배출가스 감소,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기회 확대

3)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2030년 이전 조기 달성

- (태양광) 햇빛소득 마을, 산단 지붕형 등 활용 및 공공기관 RE100을 통한 조기 보급
- (풍력) 해풍법 시행, 건설기간 단축으로 2035년까지 25GW 보급
- (바이오에너지) 우분·축분 자원화, 발전 연계 자립마을 표준모델 구축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III. 기후부 인사 동향

발령일자	대상자	前 근무지	現 근무지
4. 27.	고위공무원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장	명예퇴직
	고위공무원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명예퇴직
4. 24.	남상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부이사관 마재정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고위공무원 승진 금강유역환경청장
	서기관 송용권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4. 20.	서기관 노진만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서기관 조진화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휴직

4. 17.	부이사관 양한나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부이사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부이사관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장	고위공무원 승진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관
	부이사관 김영민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관	고위공무원 승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이사관 이정미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수석전문관 이형섭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부이사관 장이재	정책기획관실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부이사관 류필무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장
	서기관 조영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과학기술서기관 심광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실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서기관 이상현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장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범수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기술과장
	서기관 권영희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강경택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서성택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기술과장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장	
서기관 박영진	기후에너지정책관실	전력망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	분산에너지과장
4. 16.	서기관 백상현	강원특별자치도 파견근무	파견근무 연장 (6개월)
4. 15.	고위공무원 이영석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휴직)	휴직 연장 (1년)
4. 8.	공업연구원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 부장
4. 6.	고위공무원 심진수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태양광 보급추진단장 겸임 근무
	서기관 이주형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4. 3.	하동근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 장

관련 구성원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

구도형

변호사

T 02.3404.0857

E dohyung.koo@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